

민주당 공천 갈등 뇌관 터졌다

이성웅 광양시장 “국회의원에 이용 당하지 않겠다” 탈당

‘배심원 논란’ 여수·순천 등 ‘탈당 도미노’ 가능성

6·2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유력한 3선 도전 후보였던 이성웅 광양 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등 민주당 주류 측과 현역 국회의원이 밀어붙이는 공천 방법에 불만을 품은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이 늘고 있어 ‘탈당 도미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경우 기초단체장과 불리한 관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정책(政敵) 제거용’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등 경선방법을 놓고 민주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정당 공천 및 경선방법을 둘러싸고 이성웅 광양 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민주당 소속의 일부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동요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현역 단체장이 탈당을 감행한 것은 황주홍 강진군수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시장은 이날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앙정치권력에 이용당하는 불행한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면서 “이번 선거에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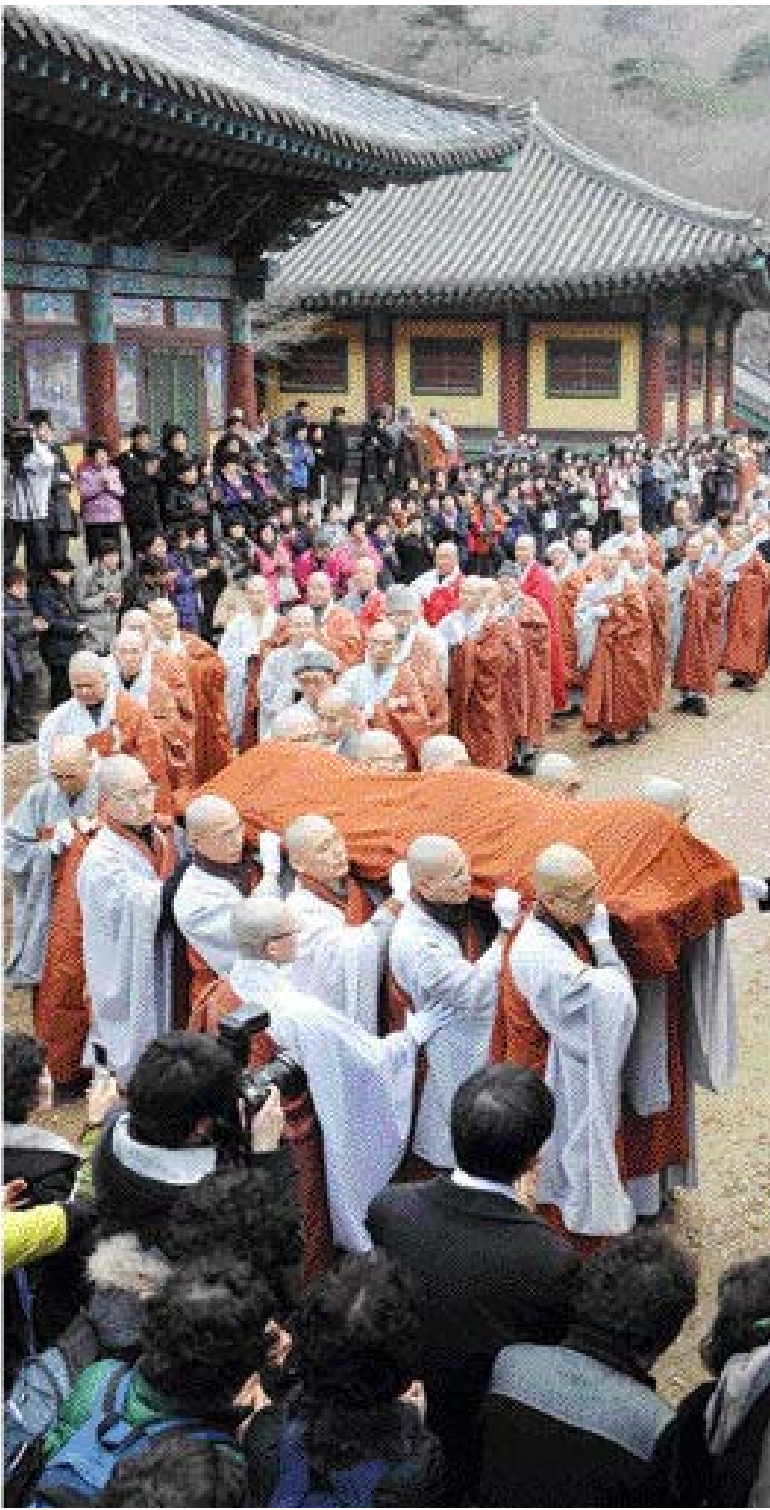
그는 특히 “독도는 포기해도 공천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일부 중앙정치인은 더 이상 자신의 공천 권력을 이용해 풀뿌리민주주의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역 지역위원장인 유우근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기초단체장의 탈당은 주변 지역인 순천과 여수, 나아가 광주 북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중앙당이 기초단체장이 반대하는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모두 열린우리계 국회의원과 민주계 기초단체장 간 불화가 이어져 왔으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현역 단체장의 교체 강하게 원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광은 청장은 “아직까지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본 적이 없다”면서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 경선방법이 결정되면 그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 남구에서는 이미 시민배심원제 도입이 확정돼 현역인 황일봉 남구정장이 무소속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황 청장은 “배심원제가 도입이 됐더라도 공정한 규칙이라면 누가 탈당하겠느냐?”라면서 “공정한 규칙이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룰이 아닐 경우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말로 해석된다.

전남지역 한 단체장은 “시민배심원제가 개혁공천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국회의원과 관계가 불편한 현역단체장을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며 “도입의 명분도 기준도 없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법정스님의 법구가 12일 순천 송광사 일주문을 지나 문수전으로 운구되는 동안 100여 스님들이 “석가모니불”을 염불하며 뒤따르고 있다. 스님의 대비식은 13일 오전 11시 봉행 된다. /순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원인 200명 중 3명 1년 평균 3차례 광주·전남 교육청에 돈 줬다

목포·여수·순천교육청도

광주시교육청을 찾은 민원인 200명 중 3명이 1년간 평균 2.6차례에 걸쳐 45만8000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도교육청 민원인 역시 200명 중 3명이 담당공무원에게 1년간 3.8차례에 걸쳐 67만6천400원의 금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 청렴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난 2008년 상반기부터 1년 간 전국 교육청을 찾아 업무를 본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제출받은 뒤 기관별로 200명을 표본 추출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 민원인들은 주로 공사나 용역 계약을 위해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 등의 형태로 금품을 제공했다.

또 광주시교육청 민원인 200명 중 2명, 전남도교육청 민원인 200명 중 1명은 담당공무원에게 1년간 각각 평균 3.5차례, 2차례 향응을 제공했으며, 그 평균 액수는 40만5천원, 22만7천500원이었다.

민원인이 건넸다는

1년 평균 금품 향응 금액	향응 평균 금액
광주시 교육청	450,800 / 405,000
전남도 교육청	676,400 / 227,500
여수 교육청	0 / 50,000
순천 교육청	986,700 / 405,000
목포 교육청	1,630,000 / 230,000

조사는 광주시 동부·서부교육청, 전남도 여수교육청 등 11개 시·군교육청에서도 이뤄졌으며, 목포교육청을 찾은 민원인 중 금품을 건넨 이들은 1년간 4.5차례에 걸쳐 무려 163만

원의 금품을 공무원에게 건네 13곳 산하 교육청 중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향응 제공도 1년간 13차례에, 평균액수는 평균 23만원이었다. 순천교육청 민원인도 1년간 각각 2.8차례, 2차례에 걸쳐 평균 98만6천700원의 금품과 40만5천원의 향응을 제공했다.

이러한 비리에 대한 적발 및 처벌 실효를 점수화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9.09점, 전남도교육청은 9.62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각각 15위와 10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교과부 감사관에

부산고검 검사 내정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에 부장검사로 임명된 고검 검사가 내정됐다.

12일 교과부에 따르면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고위공무원 직급인 감사관을 공개모집, 박준모(55) 부산고검 검사로 압축한 뒤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교과부 감사관에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내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모에는 현직 법조인 대학교수 등 10여명이 지원했다. 박 검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했으며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제천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서울시교육청도법조인 등 외부 인사를 감사담당관으로 공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스님 법구 송광사에... 오늘 대비식

지난 11일 입적한 법정스님의 대비식이 13일 오전 11시 순천 송광사에 봉행된다. (관련기사 2면) 법정 스님 대비식에서는 각계의 조사 남독과 독경, 유골 수습과정에서 사리를 찾아내 보관하는 등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이 모두 생략된다. 특히 관이 없이 법구만의 상태로 거화(炬火: 불 지킴)가 행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비식은 사찰 입구 대비장에서 거화가 시작돼 다음날인 14일 오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송광사 측은 만 하루가 지난 14일 낮 12시에 유골을 수습하는 한편 해골 후 산골시집은 추후 논의해 정할 계획이다.

또 유골은 탑을 세우지 말라는 당부도 송광사 등 법정 스님이 수행에 정진했던 곳에 뿌려질 전망이다.

송광사 범종 스님은 “스님의 유지에 따라 대비식은 최소 절차로 최대한 간소하게 치러질 것”이라며 “의식 전 행해지는 독경, 조사 등이 생략되

고 법구가 화장장에 올려진 뒤 거화가 끝나면 유골을 수습, 해골(碎骨)후 산야에 산골(散骨)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정스님의 법구는 12일 정오 스님이 입적한 서울 성북동 길상사를 떠나 송광사로 운구됐다. 이날 스님의 법구가 도착된 송광사에는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대비식에 참가하려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순천=김대성기자 bigkim@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ejkim@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기스타·세기보청기

1588-8489/0881-22-8100